

靑, 남북 정상회담 '비상체제 전환'

준비위원회 아래 종합상황실 꾸리고 일일점검태세... 후속 실무회담·고위급 회담서 큰 틀 합의 수순

남북 정상회담을 16일 앞둔 11일 청와대가 비상체제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아래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일일점검태세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담이 열리는 날까지 의제와 전략을 더 다듬고 또 세부일정 하나하나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종합상황실 중심으로 부서별 일일점검태세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남북 정상회담의 첫 준비를 알렸던 청와대는 그동안 분야별로 크게 두 차례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해왔다. 의제·경호·보도 분야(5일)와 통신분야(7일)에 대한 실무회담을 갖고 정상회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의제·경호·보도 실무회담에서는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점을 감안해 동선과 그에 따른 경호방식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신 정상회담에 수반되는 의장대 사열 여부와 함께 생중계 여부 등도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 실무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일인 27일 전에 직접 통화를 갖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과 비화기(電話機)의 구체적인 설치 장소 등을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실무회담에서 오갔던 내용을 공유하고 회담 의제와 협상전략 등 정상회담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점검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차원의 판문점 사전 답사도 마쳤다.

향후 후속 실무회담과 18일로 예정된 남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하라"

11일 전북도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민중대회를 연 가운데 GM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사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북 고위급 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뒤 정상회담에 임하는 수순이 청와대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다.

문 대통령이 이날 종합상황실 구축을 지시한 것은 정상회담 준비가 절정으로 치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굵직한 사안들은 실무회담을 거쳐 이미 조율된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실수를 허용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2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현재 공식기구로 활용 중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물론 산하에 의제·소통홍보·운영지원 등 분과위원회가 있지만 현재처럼 주 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통일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전사적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한 달 간은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 공식기구를 준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규모를 줄이는 실무형 체제를 가동했다면, 남은 기간 만큼은 빈틈 없이 준비를 위해 총력을 펼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4월8일 최종 개최 합의 후 두 달여 준비시간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3차 회담은 절반의 기간밖에 없는 주어진 시간이었다. 2차 정상회담과 비교해도 출발부터 시간이 부족했던 셈이다.

1차 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임

동원 국정원장은 자신의 회고록 '피스메이커'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때부터 실제 회담이 이뤄지기까지의 2개월 동안 매우 바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8월 정상회담 일정 도출 후 준비 과정과 관련해서 "대단히 촉박한 일정이었다"며 "(회담일) 공표 이후엔 거의 모든 청와대 인력이 달려들어,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고 회고한다.

문 대통령이 종합상황실 구축과 함께 일일점검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한 것은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 실현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 12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11일 전북기자협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하는 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30분 전주MBC공개홀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김춘진·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의 연설과 공통질문, 공약발표, 개별질문, 집중토론 등으로 이어진다.

이번 토론회는 지상파 3사가 중계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기자협회는 예비후보들에게 질문할 항목으로 전북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역개발, 지역감등 해소, 새만금성장동력, 인구감소·지방소멸 등을 선정했다. /뉴스

김관영,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정책토론회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전통산업인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 팜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뛰어난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 및 수출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에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김관영 의원은 "스마트팜 산업은 선진 각국이 앞 다퉈 육성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면서 "뛰어난 IT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팜은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준익 서울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패널토론은 김용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박종석 충남대 교수, 최기영 강원대 교수, 이주광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이춘석, 성당-용안 농로 확포장 특교세 12억 확보

"어르신 많은 농촌,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환경 만들 것"

성당면 장산리와 용안면 덕운리를 잇는 경작로가 확포장됨에 따라 그동안 농로가 좁아 농사와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던 성당 및 용안 주민들의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3일 성당면 경작로의 확·포장공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

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작로가 위치한 인근 지역은 1995년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간으로서 기계화 경작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기존 경작로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보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영농활동에 지장이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확포장 공사는 기존에 3미터였던 도로 폭을 3미터 더 확장하는 공사로 공사 구간은 약 2km정도 되며, 총사업비는 약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총 6미터의 도로 폭이 확보됨으로써 차량은 물론 농기계의 교행이 원활해져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농산물 생산지와 가공 유통시설 간의 이동이 신속해져 생산성 향상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작로와 연결된 성당면 삼회선 도로 역시 2016년에 이춘석 의원이 특교를 확보해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1년이나 앞당겨 조기에 준공됐다.

이 의원은 "작은 성과지만 농촌의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며, "농업정책 일반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더욱 세심하게 마음을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순창주민소환위 '여당 후보 깨끗하고 정직해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

11일 순창군주민소환위원회의는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느냐, 좌절하느냐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자체 적폐를 청산하면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모범을 보여 차제 정화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나라의 운명이 어찌될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쫓불정신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부정과 비리, 무능한 후보들을 과감히 정리해 깨끗하고 새로운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